

주5일 근무제 도입 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2002. 8.

연구책임자: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 I. 배경
- II. 조사방법과 대상
- III. 조사 결과와 시사점

■ 배경

- 『주5일 근무제 도입』의 찬반에 대한 설문조사는 여러 민간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되었지만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노사간에 협의되었던 제도 도입 방향에 대해 국민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없었음.

조사기관	조사대상	조사시기	찬성 비중
리크루트, 다음커뮤니케이션	직장인	2002	92%
국정홍보처	일반국민	2001	74.1%
MBC	일반국민	2001	74.2%

- 이제 많은 기업들이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해보고 있으며(2002. 7. 노동부 조사결과) 국민의 대다수가 주5일 근무제의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동안 노사협상에서 논의되었으나 최근 다시 대립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과연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여론조사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층화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하여 1,000개의 유효표본을 얻을 수 있도록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 조사방법과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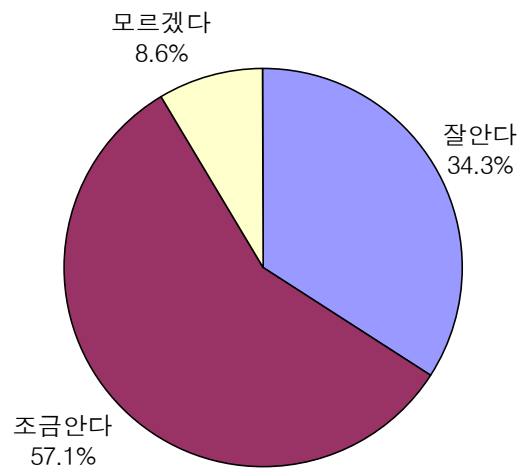
○ 본 여론조사의 대상은 일반 국민이며 성별, 연령별, 학력별, 취업지위별, 근로형태별, 지역별, 소득수준별, 주5일 근무제 인지도별로 구분하여 그들의 성향을 살펴보았음.

- 조사방법: 전화를 통한 인터뷰
- 조사규모: 1,000명(전국 단위)
- 조사시기: 2002년 8월 19일 ~ 2002년 8월 23일
- 표본 오차: $\pm 3\%$ 오차구간 적용
- 표본 추출 방법: 층화표본 무작위 추출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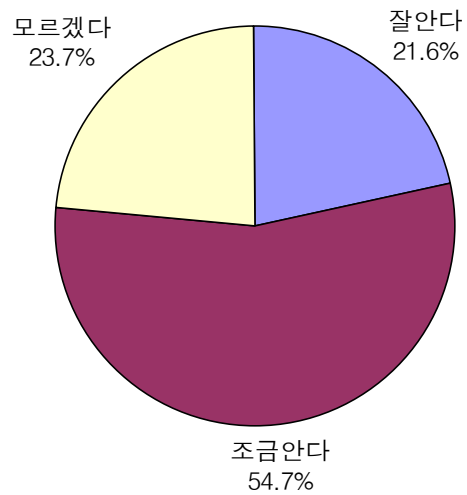
■ 조사결과와 시사점

- 현재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의 논의과정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그리고 그 동안 논의되었던 내용(법정근로시간의 단축뿐만이 아닌 휴가·휴일의 개선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근로조건들의 재조정)에 대해서는 약 75%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남성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으며, 임금이나 휴가·휴일의 조정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받아드리려는 생각이 형성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효과가 크리라고 기대하고 있음.
- 사안마다 약간의 상대적 차이는 있으나 주5일 근무제가 논의되어 가는 과정을 알면 알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국민들은 주5일제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의 논의 방향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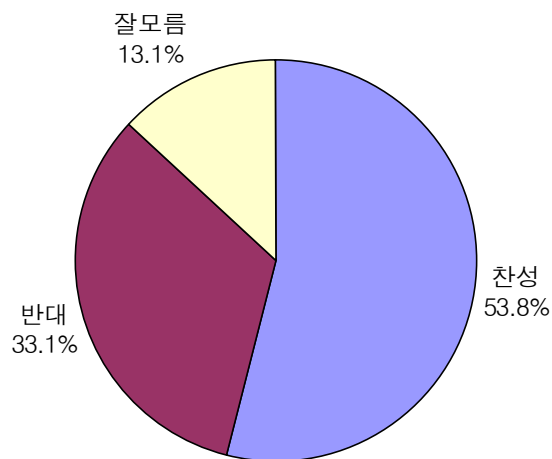


[그림 2] 정부가 추진중인 법개정안 내용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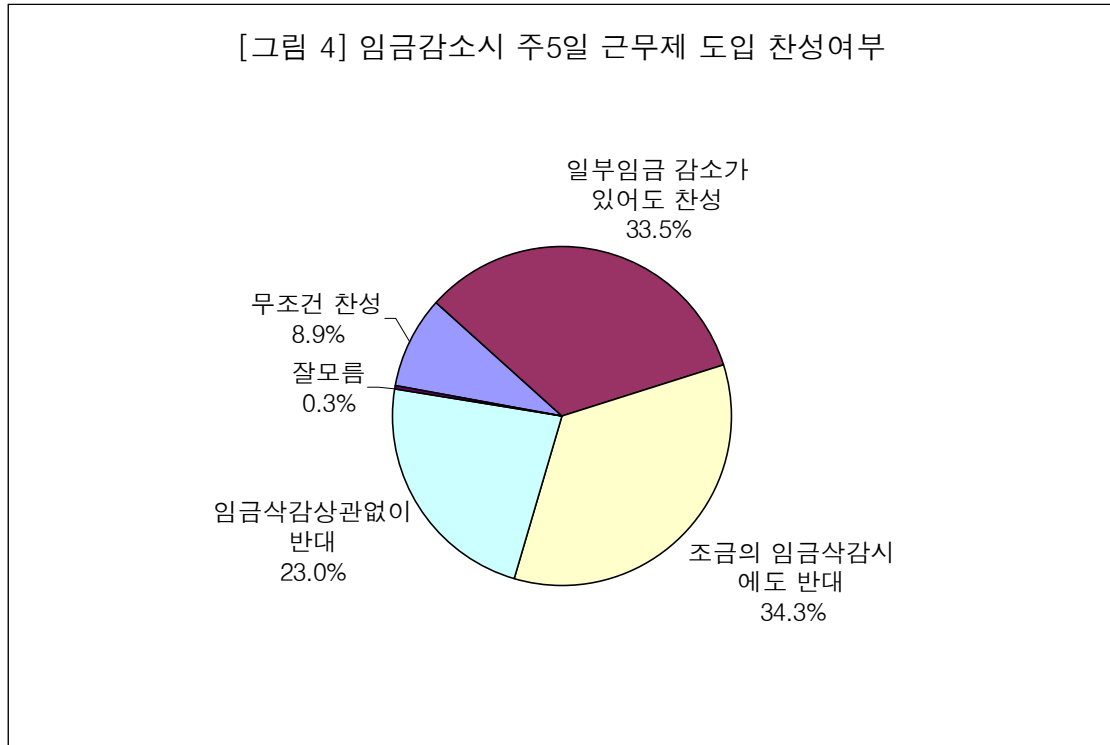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의 도입과 동반되어 전체적인 휴가·휴일제도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축소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의 53.8%가 「찬성」, 33.1%는 「반대」, 13.1%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서 과반수 정도가 휴가·휴일제도의 개선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생산직 또는 사무직에 상관없이 근로자들의 약 60%가 「찬성」의 응답을 보이고 있음.

[그림 3]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휴일제도 축소조정 찬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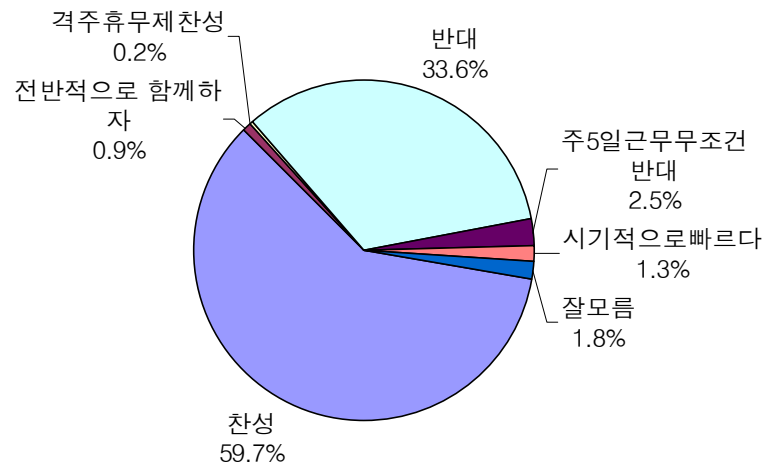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으로 전체 임금 중 일부가 감소될 경우 국민들은 「무조건 찬성」 8.9%,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 33.5%의 응답을 보여 국민의 42.4%는 임금조정이 있더라도 찬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휴가·휴일의 조정보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가 34.3%로 임금삭감이 없는 경우에는 찬성할 의도가 있으나 임금삭감까지 감수하면서 주5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라는 태도를 보임.
- 한편 「임금삭감과 상관없이 무조건 반대」가 23%로 나타나, 다른 실태조사에서 약 75%의 국민이 찬성하고 있는 모습과 일관된 내용을 보여주고 있음.
- 직업별 분석에서 근로자들의 경우 11.5%가 「무조건 찬성」, 41.7%가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으로 나타나 총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이 부분에 있어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의 입장차이가 나타나는데, 「무조건 찬성」이 생산직근로자의 경우 11.3%, 사무직의 경우는 11.5%로 비슷한 반면, 「임금의 일부가 감소하더라도 찬성」은 생산직근로자 29.5%, 사무직근로자 46.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마찬가지로 「조금의 임금감소가 있더라도 반대」의 경우 생산직근로자는 43.7%의 반대의견을 보인 반면, 사무직근로자는 30.9%의 비중을 차지해서 위의 차이를 다시 증명하고 있음.

- 따라서 생산직근로자가 사무직근로자보다 임금 감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대기업과 금융산업과 같이 근로조건이 유리한 부분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어 가는 계획에 대한 질문에 전체의 약 60%가 찬성하고 있으며 33.6%가 반대의견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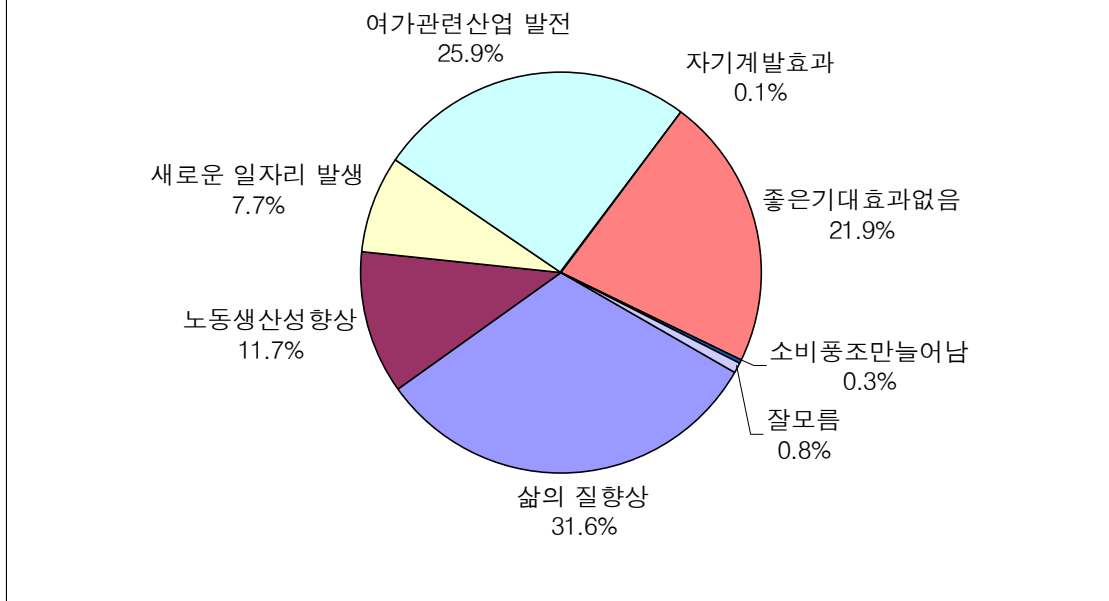
[그림 5] 기업경영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찬성여부



○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될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해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보여주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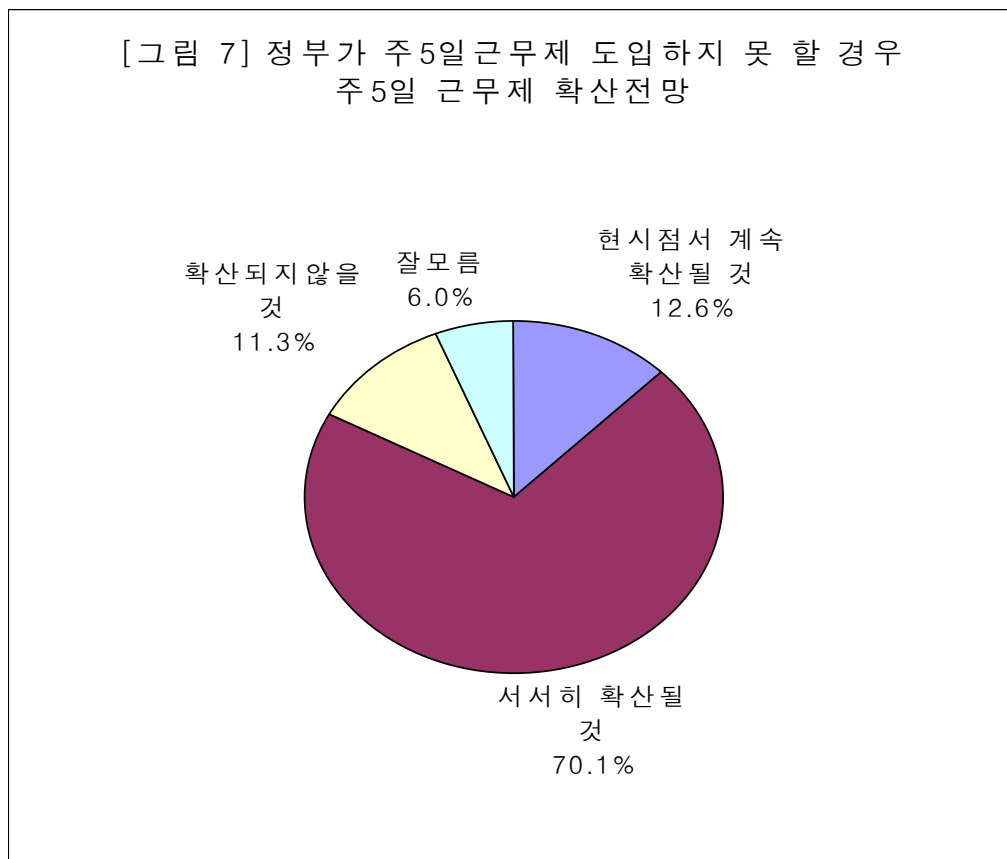
- 예상했던 대로 「삶의 질 향상」이 3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었고,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25.9%로 그 뒤를 이었고, 다음으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11.7%, 「새로운 일자리의 발생」이 7.7% 등으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예상하는 국민이 약 77%로 나타남.
- 생산직근로자와 사무직근로자사이에도 입장차이가 나타나는데, 사무직의 경우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22.1%, 「삶의 질 향상」이 무려 42.4%의 비중을 기록하는 한편, 생산직 근로자는 「여가관련 산업의 발전」이 33.1%, 「삶의 질 향상」이 22.5%를 기록하여 생산직근로자보다 사무직근로자가 주5일 근무제 도입시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주5일근무제 도입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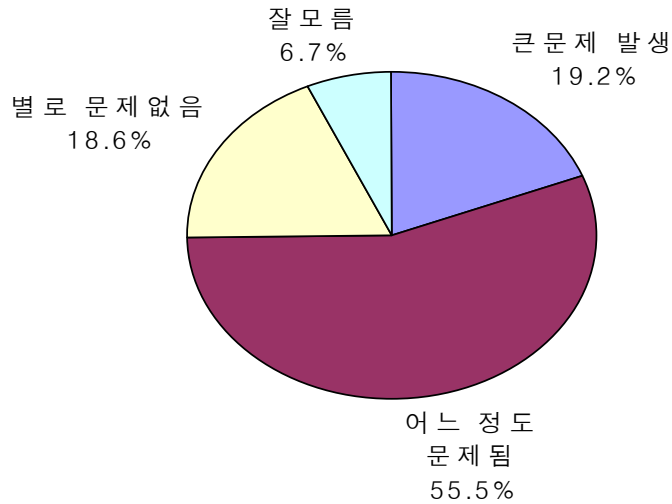
- 이 같은 상황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약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추진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질문한 결과
 - 국민들은 주5일 근무제가 「현시점에서 계속 확산되어갈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2.6%, 「서서히 확산되어 나갈 것」이 70.1%로 나타나 주5일 근무제의 도입에 대해 국민들은 이미 대세로 판단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확산되지 않을 것」은 11.3%, 「잘 모르겠음」은 6.0%로 나타남.)
 - 이렇듯 주5일 근무제의 확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비효율적인 노동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주5일 근무제는 확산될 것인데, 이러한 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동반되지 않는 확산이 진행되면 될수록 현실과 적용법 사이의 괴리와 사업장간의 근로조건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될 것임.



- 한편 이런 상황에 봉착했을 때 향후 주5일 근무제가 노사교섭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며 이때 발생하는 노사분규가 국가경제에 큰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국민들은 대부분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큰 문제가 될 것」이 19.2%, 「어느 정도 문제가 될 것」이 55.5%로 전체의 약 75%가 문제발생을 예상한 반면, 「별로 문제가 없을 것」이 18.6%로 나타남.

[그림 8] 정부가 주5일근무제 도입하지 못 할 경우
노사분규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을 중단하거나 실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인 비효율적인 법적용의 문제, 법과 현실과의 괴리 확대, 노사간의 갈등 발생, 근로조건 격차 확대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약 75~80%의 국민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